

김도균 교수의회 의장을 만나
임기동안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와
올해 활동계획을 물었다.



우리신문은 체육대학 내 부조리와 군기문제가 여전히 존재하는지 점검해봤다.

2023년 4월 10일 월요일

대학주보

체육학과 학생회, 이상형 묻는 자기소개서 제출하게 했다

이동건 기자 ehdrjs3589@khu.ac.kr

체육대학(체대) 체육학과 학생회는 지난 몇 년간 신입생들에게 자기소개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해당 자기소개서는 체육학과 학생회가 제시한 질문에 간단한 답을 작성하게 돼 있다. 작성과 제출은 필수사항이다.

익명을 요청한 체육학과 신입생 A 씨는 “신상이 포함된 자기소개서를 쓰는 것에 전혀 공감할 수 없고, 학생회에서 신상을 요구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신입생 모두에게 제출하도록 했기 때문에, 부담을 느

끼도 어쩔 수 없이 제출했다”고 밝혔다.

체육학과 학생회 오현명(체육학 2018) 회장은 자기소개서에 악의적인 의도는 없다고 반박했다. 오 회장은 “자기소개서를 받는 이유는 인원 파악과 인적 사항을 확인하기 위함이고 별 다른 이유는 없다”며 “이것을 빌미로 다른 방면으로 문제가 된 상황은 없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자기소개서 문항에는 인적 사항만 기재된 것이 아니었다. 우리신문이 입수한 신입생 자기소개서에는 ▲이상형 ▲가장 마음에

드는 과학생물 인물(오직 한 명) ▲주거형태 ▲통학거리 ▲취미 ▲출신고등학교 ▲가족관계(ex. 1남 2녀 중 첫째) ▲주량 ▲흡연유무 ▲자기소개 및 하고 싶은 말 등이 명시돼 있었으며 증명사진도 함께 첨부하도록 했다. A 씨는 “일반적인 자기소개서라도 제출하기 부담스러운데, 질문사항들이 과도하다고 생각한다”며 “이상형과 마음에 드는 선배를 적는 건 납득되지 않는 걸 넘어서 부조리이다”고 전했다. 또 다른 체육대학 신입생 B 씨는 “주량이 명시돼 있는 것을 보고 ‘술

문화가 강압적인가’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이상형을 물어보는 것도 굉장히 부담스러웠다”고 말했다.

오 회장은 “이상형을 쓰는 이유는 신입생들에게 편하게 다가가기 위해서였고, 주량과 흡연 여부는 과한 음주와 흡연 유도를 피하고자 했기 때문이다”며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지 몰랐다”고 밝혔다. 또한 자기소개서가 필수 제출이었음을 인정하면서도 “매년 받아왔던 양식으로 진행하는 것이고, 제출하면서 얼굴을 익히고 동시에 친목 도모를 하기 위함이다”고 설명했다.

체대 학생회 최준렬(체육학과 2018) 회장 역시 “학과 학생회 차원에서 기본적인 신상을 앞으로서 돌발상황을 예방하고자 하는 책임감에 의해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다들 생각이 다르겠지만, 악의적인 의도가 투영됐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서 “학우분들이 불편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확인한다면, 학과 학생회에서 현명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6면으로 이어짐



4월 4일 청운관 앞 우리학교 교수진의 시국선언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사진=정다연 기자)

강제동원 해법 철회 교수진 시국선언

정다연 기자 ekdusgood@khu.ac.kr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 철회를 요구하는 양 캠퍼스 교수 125명의 시국선언이 지난 4일 오후 4시 30분 청운관 앞에서 있었다. 지난 30일부

터 4일까지 6일간 125명의 교수가 서명했다.

이날 우리학교 교수 15명은 ‘윤석열 대통령은 기괴한 강제동원 해법을 당장 철회하라’는 제목으로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교수들은 ▲사

법부에서 인정한 보편적인 인권과 피해자들의 권리를 배반하지 말라 ▲피해자들이 돈 몇 푼으로 입을 다물 것이라 기대하지 말라 ▲아시아의 진정한 평화와 공존을 꿈꾸는 한일 양국의 양심적 시민들의 노력과 역사의식을 무시하지 말라 ▲굴욕적 한일회담을 반성하고 기괴한 강제동원 해법을 당장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지난 1월 12일 윤석열 정부는 ‘강제징용 해법 논의’를 위한 공개토론회를 통해 ‘병존적 채무인수’ 방안을 내세웠다. 2018년 대법원은 일제강점기 전범 기업이 강제 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병존적 채무인수’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일본 가해 기업이 아닌, 제3자로부터 판결금을 대신 변제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담는다. 이에 강제동원 해법 철회를 요구하며 교수들은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열었다.

시국선언문에는 “분하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하루아침에 대법원 판결을 뒤엎고 피해자들의 권리를 무시하며 역사를 퇴행시켰다”고 비판했다. 덧붙여 윤 대통령이 주장한 ‘미래를 위한 대승적 결단’ 제3자 변제 방식은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치욕감을 주는 조치는 대승적 결단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3면으로 이어짐